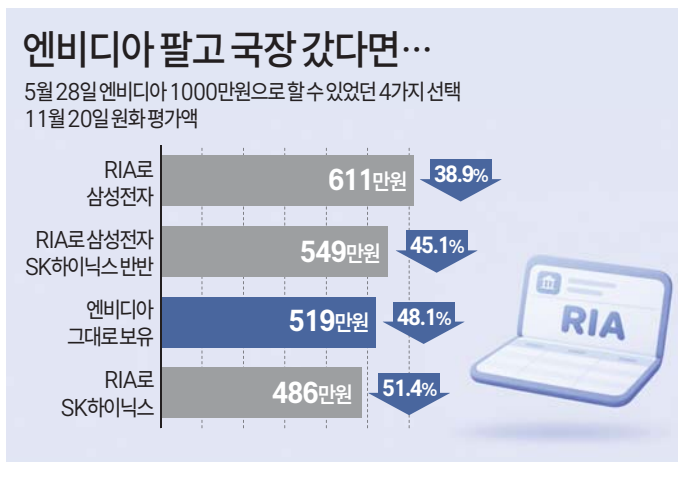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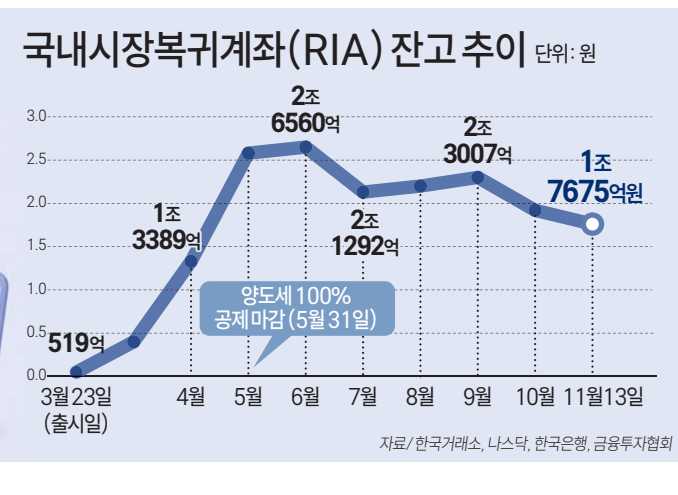
“세금 아끼려 미장 팔았는데”… 국장 돌아온 개미들 ‘곡소리’

RIA 잔고 6월 말 정점 대비 33%↓
같은 기간 미국 증시도 하락해 손실
국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 회복 우선





자료/한국거래소, 나스닥,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대기업 9년 차 직장인 김모씨(35·남)는 요즘 증권 계좌를 열어보지 못한다. 김씨는 지난 5월 국내시장복귀계좌(RIA)에서 수익률 100%가 넘던 TQQQ(나스닥100 3배 레버리지 ETF) 5000만원어치를 팔았다. 양도세 700만~800만원을 아끼려는 선택이었다. 이 가운데 3000만원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을 샀고, 돈은 내년 5월까지 RIA에 묶여 있다. 김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아 계좌를 열지 못하고 있다”며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다”고 말했다.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로 복귀한 개미(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미장(미국시장) 팔아서 국장(국내 시장) 총알받이 됐다”라는 한탄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RIA를 통해 국내 증시로 돌아온 서학개미들의 손실은 미국 주식을 그대로 들고 있던 투자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의 원인은 국장 복귀 자체가 아니라 국내외 증시의 동반 하락이었다는 얘기다. 5월 28일 엔비디아 1000만원어치를 팔아 RIA에서 삼성전자를 샀다면 20일 종가 기준 평가액은 611만원, SK하이닉스를 샀다면 486만원이다. 엔비디아를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519만원이다.

주가만 놓고 보면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삼성전자를 산 쪽은 엔비디아를 들고 있던 쪽보다 92만원 덜 잃었지만, SK하이닉스를 산 쪽은 33만원 더 잃었다. 엔비디아가 20일(현지시간) 하루에만 14% 급락하기 전까지는 엔비디아를 들고 있던 쪽이 두 종목을 절반씩 산 경우보다도 손실이 작았다. 하지만 세금까지 따지면 RIA로 옮긴 쪽이 유리하다. 위 계산은 양도세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미국 주식을 그대로 들고 있는 투자자는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도 TQQQ를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손실은 더 컸다. TQQQ는 5월 28일 83.68달러에서 20일(현지시간) 41.20달러로 50.8% 떨어졌다.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이 1501.6원에서 1330.8원으로 11.4% 내리면서 원화 기준 손실률은 56.4%로 불어난다. 5000만원이 2200만원 남짓으로 줄었을 것이란 계산이다. 반면 김씨는 2000만원을 현금으로 뒀고, 주식 손실률도 본인 추정으로 30% 정도라 RIA 계좌는 4100만원 안팎이다. 국내 주식 손실이 눈앞에 보일 뿐, 미국에 남았어도 피할 수 없었던 하락이었다.

100% 양도소득세 감면을 믿고 5월 말 국내 증시로 유턴한 개미들은 한숨만 나온다. RIA 잔고는 5월 19일부터 5월 말까지 12일 만에 6396억원 늘어 2조5839억원이 됐다. 그러나 이들이 들어온 시점은 국내 증시의 고점 부근이었다. 3월 출시 직후 20만원 안팎이던 삼성전자를 산 투자자의 손실은 상대적으로 작다. 6월 중순 9000선을 넘었던 코스피는 20일 하루에만 5.21% 급락하며 4869.96으로 마감했다. 5월 28일 이후 SK하이닉스는 229만원에서 111만3000원으로 51.4%, 삼성전자는 29만9500원에서 18만3100원으로 38.9% 떨어졌다.

금투협에 따르면 RIA를 통해 가장 많이 판 해외 주식은 엔비디아(1801억원), 가장 많이 산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였다.

국내 온라인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미장을 팔면 세제 혜택보다 평가손실이 더 크다” “코스피 4800선까지 추락하는 상황에 지금 들어가라는 게 말이 되냐”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개미들의 걱정은 RIA 잔고에서 확인된다. 금투협에 따르면 RIA 잔고는 6월 말 2조656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7월 한 달 새 19.8% 줄었다. 11월 13일 기준 잔고는 1조7675억원으로 정점보다 33.5%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가입계좌는 31만3594좌에서 35만4574좌로 오히려 늘었다. 계좌는 늘었는데 잔고는 3분의 1이 줄어든 셈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RIA로 옮기려면 환율이 높고, 미국은 고평가돼 있고, 한국은 오를 거라는 세 가지 믿음이 한꺼번에 있어야 한다”며 “지금은 환율이 이미 많이 내려왔고 미국 주식도 손실인 상황이라, 손절까지 하고 들어올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PBR 기준으로 거의 1배 수준까지 내려와 있긴 하다”면서도 “그렇다고 미국 주식을 팔고 한국 주식을 사겠냐고 하면 안 그럴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고치는 것보다 개인 투자자의 주식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지난 여름 레버리지 ETF 수급 문제 등으로 개인들이 신뢰를 많이 잃었다”고 덧붙였다. /김아영 기자 aykim@metroseoul.co.kr

‘기대주’ 앤트로픽, 상장 이틀 만에 주가 흔들

하루 만에 시총 약 1090억달러 증발
공모주 절반, 기존 투자자에게 배정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사상 최대 규모로 기업공개(IPO)를 마친 뒤 거래 이틀째 주가가 크게 흔들리면서 월가에서 그 원인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모주 배분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가 소외된 점, 임직원들에게 즉각 대규모 주식 매각을 허용한 점, 주관사들의 상장 초기 가격 설정 등이 주가 하락 요인으로 거론된다.

전날 뉴욕증시에서 앤트로픽 주가는 전장보다 8.5% 내린 88.9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 1090억달러가 증발했다. 장중에는 한때 전장 대비 15%까지 떨어지며 공모가인 83달러보다 불과 5센트 높은 수준까지 밀렸다.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문제 중 하나는 공모주 배분 방식이다. IPO에서 배정된 810억달러 규모의 주식 중 절반 이상이 알티미터캐피털,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초기 투자자에 대한 보상 차원이었다지만, 이례적으로 높은 비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공모주를 신청한 기관 가운데 약 60%는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록도 요청 물량인 약 100억달러의 절반 수준만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타델 등 대형 투자사에 상당한 물량이 배정되면서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의 대규모 사용자에게 우선권을 준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거래 개시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첫 거래 가격이 과도하게 높으면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주가 하락 흐름을 되돌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상장 직후 주식 매각을 허용한 점도 하락 압력 요인으로 거론된다. 앤트로픽은 일부 전현직 직원들이 보유한 약 3억주를 즉시 매도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가 기준으로 약 260억달러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상장 후 수개월간 임직원의 보유 주식 매각을 제한하는 보호예수를 적용한다. 앤트로픽은 이례적으로 일부 임직원에게 즉각적인 매각을 허용했고, 이 주식의 매도가 실제로 이뤄졌다면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가가 공모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주관사들이 가격을 지지할 수단도 제한적이다. 앤트로픽은 주관사들이 주가 안정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초과배정옵션(그린슈)이 이미 행사됐다고 밝혔다. 이 옵션은 주가가 공모가 아래로 떨어질 때 주관사들이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해 가격을 지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12월 15일에는 약 3억주의 주식이 추가로 거래 가능해질 예정이어서 향후 매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WSJ은 전했다.

앤트로픽과 주관사 측은 이번 IPO가 성공적이라는 입장이다. IPO와 동시 진행된 주식 매각을 합쳐 1000억달러 이상을 조달했고, 주가도 아직 공모가를 웃돌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

금감원, AI로 불법 사채 무효심사

판독 속도 10배 이상 빨라져

불법 사채 피해자가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무효확인서 심사에 인공지능(AI)을 도입했다. 메신저 대화와 입금 내역을 대조하는 증빙 판독 속도가 수작업보다 10배 이상 빨라져, 신청이 늘어난 피해자 구제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무효확인서 발급 심사에 AI 판독 시스템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무효확인서는 연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금감원장 명의의 문서다. 지난 9월 무효확인서를 토대로 한 첫 형사 무죄 판결이 나온 뒤 발급 신청이 크게 늘었다.

불법 사채는 차용증에 적힌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거나 메신저 대화 중 대출 조건이 바뀌는 등 거래 방식이 복잡하다. 신청 건마다 평균 수십 건의 증빙이 첨부돼 그동안 담당자가 대화 내용과 입금 내역을 직접 대조하며 이자율을 계산해 왔다.

새 시스템은 계약 조건과 실제 입금 사실을 확인하고 연이자율이 60%를 넘는지 판단하는 작업을 돕는다. 금감원은 증빙 판독 속도가 수작업 대비 10배 이상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무효확인서 발급 여부는 종전처럼 담당자가 최종 판단한다. 제출 자료는 금감원 내부 AI 서버에서만 처리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내역이 외부로 전송되지 않도록 설계했다.

무효확인서는 불법 대부업자에게 추심 중단을 요구할 때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급명령이나 형사재판에서도 증거로 채택돼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활용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카카오페이·토스, 신분증 위변조 검증 강화

정부 시스템 연계해 진위 확인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23일부터 비대면 고객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의 사진정보까지 포함해 신분증 진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신분증에 적힌 정보가 유효한지 확인했다면, 앞으로는 은행·증권·보험사처럼 정부 시스템을 통해 위·변조 여부도 검증한다. 네이버페이는 다음 달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와 토스는 금융결제원을 거쳐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에 연계된다. 두 회사는 전자금융업계에서 처음으로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뿐 아니라 사진정보를 포함한 신분증 진위를 비대면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7월 행안부와 카카오페이·토스·네이버페이,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행안부는 전자금융업계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마련했고, 금융결제원은 기존 금융회사에 제공하던 진위확인 중계망을 카카오페이·토스와 연계했다. 금감원은 서비스 개시에 앞서 신분증 진위확인 기술과 운영·관리 체계에 대한 보안 점검을 실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페이에서는 약 750만 건, 토스에서는 약 1000만 건의 비대면 고객확인이 이뤄졌다. /허정윤 기자

진승욱 대표, ‘사람 살리는 금융’ 동참

〈대신증권〉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취약계층 보호

대신증권은 진승욱 대표가 서민금융진흥원이 주관하는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금융권 주요 인사들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금융취약계층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포용금융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 대표는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의 지명을 받아 참여했다.

진 대표는 “금융은 고객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어려운 순간에도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사기 예방에 힘쓰고, 누구나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진승욱 대신증권 대표이사(가운데)가 서민금융진흥원 주관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대신증권